

올림픽공사 지역업체 우대조항 추진

도·건설업계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키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정부부처 협의

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.

5일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, 대한건설협회 도회 등에 따르면 이달 내로 특별법에 포함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. 현재 동계올

림픽 지원 특별법에는 '시행자 및 특 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 대기준을 정한다'는 모호한 기준이 규정으로 적용돼 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될 올림픽 관 련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

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정부 부처 및 발주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.

특히 지역업체 우대조항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을 관장하는 기재부·행안부 등 정부 부 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지역 건설업계 의 통일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 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.

도와 지역 건설단체가 마련할 기준 에는 △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△분 할 발주 △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 설산업용 자재·인력 등 우선 사용 및 고용 △지역 내 하도급업체 참여 등

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.

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"동 계올림픽 특별법과 시행령이 각각 제 정됐지만 지역업체 우대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지역 건 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"며 "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우대를 위해서는 기재부·행안부 장 관 등과 협의를 거쳐지게 되어 있어 구 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 추진 중"이라고 말했다.

하위윤기자 faw4939@kwnews.co.kr